

전후세대의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

안 청 시*

<목 차>	
I. 문제의 제기	(1)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
II. 전후세대 정치의식의 현황	(2) 이데올로기문제
1. 전후세대의 정치체제관	(3) 민족주의관
(1) 국가적 상징에 대한 태도	3.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의식
(2) 정치적 권위에 대한 태도	III. 결론: 정치사회에 대한 이론적 합의
(3) 정치적 신뢰감	
2. 전후세대의 이념적 정향	

I. 문제의 제기

한국인의 정치의식이나 정치문화의 속성을 논할 때마다 권위주의적 성격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한국 정치문화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바 있는 윤천주교수(1979: 270-278)는 유교적 윤리규범에 바탕을 둔 전제군주치제의 정치적 전통에서 권위주의적 속성의 연원을 찾고 있다. 윤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격이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을 장악적 지배와 예속적 복종의 형태로 나타나게 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한태수교수(1968: 491-527)는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으로 “신권적 정치의식”을 지적하고 있으며, 조일문교수(1973: 101-109)도 한국 정치문화의 구조적 특질을 “군주주의” 전통에서 찾고 있다. 또한 이지훈교수(1982: 99-102)가 1981년까지 한국 정치문화를 연구한 22편의 저서 및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주제를 정리한 결과 권위주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한국 정치문화에 대하여 가장 널리 지적되어 온 특성은 바로 권위주의적 성격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는 조선조의 유교적

* 서울大 社會大, 政治學

문화전통과 봉건적 통치의 유산인 동시에 일제시대의 강압적인 식민통치의 잔재이기도 하다.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체제상으로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북분단이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건국과 이 때 탄생된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권위있는 정부를 세워야 했다. 한편 새 나라를 이끌어 갈 엘리트와 국민은 다 같이 권위주의의 유산을 극복할 겨를이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구축을 위한 과업을 떠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속성은 다시 강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사는 전통을 거듭하기도 했다. 한편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리더쉽을 통치체제의 조직원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국 정치문화가 권위주의적 특성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처럼 대부분의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비록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간의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질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 또한 확실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과정에 충만하고 있는 민주화의 열기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바로메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와 한국인의 정치의식은 소위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전통적 특성과 얼마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 그 복합적인 배후관계와 인과의 법칙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규명하는 일은 한국사회와 그 정치의 발전정도 및 전망을 헤아려 보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식의 정향은 그 사회체계의 물질적 토대와 구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결정지우는 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위의 문제의식을 세대간 문화의 전승, 또는 단절현상이란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 추적해 보려고 한다. 한국정치의 문화적 정향이 그 원형에서부터 크게 변화되어 왔다면, 그러한 변화의 추세는 당연히 세대간에 서로 공유하거나 각기 독자적인 문화정향에서도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비하여 보다 새롭고 근대적인 문화정향을 대표한다고 알려져 있다. 젊은 세대의 문화유형이 기성세대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차이나는가, 특히 이들 두 문화유형들은

서로 연속적·조화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단절적·갈등적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의 특징을 규명하고, 정치체제의 변모양상을 조망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문화적 정향과 가치관은 행동체계를 결정하는 독립변수로도 작용한다.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세대의 투표향배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정치문화의 세대간 차이와 그 동태를 규명해 보는 일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일차자료를 독자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연구된 결과들 중에서 이 글의 목적과 범위에 타당한 것들을 가려내고 재해석함으로써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에 접근하는 방법을택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은 확실한 해답이라기보다 앞으로 보다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유익한 가설들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연구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예비작업, 즉 탐색적 연구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세대(generation)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엄밀한 개념정립과 조작화의 기준을 시도하지 않았다.

사회학자들은 세대란 개념을 기능중심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에 의하면, 기성세대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세대이며, 젊은 세대는 기존질서에 적응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창조와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대를 가장 초보적으로 이해하여 일차적으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주를 구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세대문제를 논하는 이들 가운데는 정치적 및 사회적 경험의 공유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세대구분의 두번째 기준으로는 정치, 사회적 경험의 공유여부를 보기로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세대구분은 크게 보아 1) 일제치하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여부, 2) 6.25의 체험을 공유했느냐 아니냐의 여부, 3) 근대화의 혜택, 또는 60~70년대의 권위주의적 환경하에서 사회화의 중요 시기를 보냈느냐 아니냐의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그 범주를 나누는 것이 대체로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일제의 교육을 받은 층과 60~70년대에 사회화의 중요시기를 겪은 층만 보면 인구구성으로 보아 소수에 해당하거나,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을 제

의하게 될 염려를 낳는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고, 또한 이 글의 목적이 탐색적인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집단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후세대”란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대상을 추려내고자 한다. 전후세대란 한국현대사에 커다란 전환점을 이룬 6·25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 즉 대체로 40대 초반보다 젊은 연령층에 미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령층은 현재 우리나라 유권자 총수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일련의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다. 전후 세대중에서도 특히 이념지향성이 강하며, 사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선도하는 집단이 대학생집단이다. 이들은 또한 물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비교적 풍요한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정치적으로는 유신체제등 권위주의적 환경속에서 감수성이 강한 교육기를 보낸 세대이기도 하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자료가 허용하는 한 이들 대학생집단의 정치의식과 가치관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여 살펴보는 데도 각별히 유의할 것이다.

정치문화와 의식은 다양한 차원에서 그 경험적 지수들(indicators)을 뽑아 분석 가능하다. 예컨데 Almond (Almond and Verba, 1963:14-15)는 체제의 구성원이 갖는 정치적 정향은 인지적 측면(cognitive orientation), 감성적 측면(affective orientation), 평가적 측면(evaluative orientation) 등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정향은 자기 다음과 같은 대상들에 대한 의식과 태도, 가치 등을 통하여 관찰 가능하다고 한다.

1) 체계일반의 특성에 대한 정향 : 충성심, 소외감, 민족적 주체성, 체제가 민주적이나, 입헌적이나, 사회주의적이나 등에 대한 정향

2) 정치적 투입대상에 대한 정향 : 입법부, 이익집단, 정당 또는 언론기관이나 이를 관리하는 주요 역할담당자들이 사회의 요구를 얼마나 잘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정향

3) 정치적 산출에 대한 정향 : 만들어진 정책의 내용 및 관료기구나 사법부 등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 또는 규제하느냐 하는 데 대한 정향

4) 정치적 자아의식 : 자신의 정치적 의무나 역할에 대한 정향 및 정치적 효능감 등.

이러한 틀을 염밀하게 적용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연구계획과 세목화된 자

교수집이 필요하다.

이처럼 체계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여건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정치의식을 1) 정치체제에 대한 귀속의식과 정향, 2) 이념적 차원에서 본 정치의식, 그리고 3) 참여적 정향에서 본 정치의식으로 대별하여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전후세대 정치의식의 현황

정치의식이란 정치체계일반 또는 특정한 정치문제나 정책에 대하여 갖는 정치행동의 先有定向으로서 정치적인 사고와 인지, 정치적 대상에 대한 감정과 평가 등에 관련된 정향과 태도를 의미한다. 정치의식은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정치과정에 대한 정향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권력주체에 대한 호, 불호의 감정이나 권력자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정치의식을 정치체제와 정치이념, 그리고 참여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체제의 차원은 다시 국가적 상징에 대한 태도, 정치적 권위에 대한 태도, 체제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정치이념의 문제는 통일에 대한 의식과 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정향, 민족주의와 관련된 문제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치참여는 정치효능감, 투표행태 및 정치운동에 관한 정향 등을 통해 보기로 했다.

1. 전후세대의 정치체제관

(1) 국가적 상징에 대한 태도

한 국가의 상징물은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귀속의식과 국민의 일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상징물에 대한 국민들의 애착과 지지는 그 국가의 목표와 가치를 인정하고 정통성을 인정하는 공동체 의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상징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체제유지에는 그만큼 도움이 되기도 한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는 남녀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를 연구한 최경규(1985:196) 교수는 그들이 우리나라 태극기와 애국가, 무궁화 등의 국가적 상징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밝

혀냈다. 그런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국가적 상징에 대해 보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와 국가의 상징물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인지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최교수는 지적한다. 진덕규 교수(1971: 455-456)는 이와 약간 대조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약 700명의 학생들을 조사한 진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당신은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기라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에 강한 지지를 표명하는 비율이 56.0%, 약한 지지를 표명하는 비율이 30.5%로 나와 전체적으로는 최교수의 연구와 같이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진교수는 이 태도에 대해 연령간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에 대해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갖는 태도를 연구한 바 있는 김규택 교수(1969: 224)에 의하면, “태극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기이다”에 대해 “옳다”고 지지를 표시하는 어린이들이 평균 67%로 드러나 중고등학생들보다는 높은 긍정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국민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옳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낮게 나타나 앞의 최교수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이 갖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한국인으로서 갖는 자부심의 정도를 조사한 김충남씨(1982: 86-87)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국가적 자부심과 정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는 물론 각자 조사시기와 표본집단의 크기 및 구성이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국가적 상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어린이와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들로 올라갈수록 약해진다. 나아가 특히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젊은이들이 국가적 상징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 평가가 약화된다는 것은 대학생 샘플을 포함한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론을 보이고 있다. 박용현 교수의 연구(1980: 348)에 의하면, “태극기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좋은 국기이다”라는 항목에 국졸, 중졸, 고졸 학력자는 거의 90%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데 비하여 대졸은 약 80%, 대재는 약 73%로 줄어 들었다. 세대별로 보아도 10대 및 30대 이상의 연령층은 거의 85%를 넘으나 20대는 78.3%로 나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긍정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정치적 권위에 대한 태도

정치적 권위에 관한 인식과 태도는 체제구성원들이 국가 및 그 권위체에 대하여 얼마만큼 신뢰하며 동일시 하느냐를 나타내주며, 이는 체제에 대한 지지도와 체제능력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인정되고 있다. 정치적 권위에 대한 태도는 지도자관, 권위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식, 권위를 수행하는 제도나 기구에 대한 신뢰성 등을 통해 관찰 가능하다.

정치지도자에 대한 태도는 사회화과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아동기부터 발달한다. 아동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존경심 또는 동일화를 통해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배우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지도자관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사회화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김재영교수(1979: 169)는 한국 어린이들에게 강하게 잠재되어 있는 권위주의 의식을 교육사회화과정과 관련시켜 설명한 바 있다. 김규택교수(1969: 97)도 한국 어린이들의 대통령에 대한 반응을 연구한 결과 이들에게는 관우위 내지 관지향적 정향이 어린 시절부터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특히 감성적 차원으로부터 비롯된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존경과 복종의식은 성장함에 따라 조건적이고 현실적인 인지와 태도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정치적 권위의 대상으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국회의원, 군인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앞의 최경규교수(1985: 197-198)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은 이들 권위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김충남교수(1982: 98)도 정치적 권위체들, 즉 정치지도자,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대한 이미지는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박용현교수의 연구(1980: 341-342)에서도 “국가 권위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민주적이 아니다”라는 문항에 대해 20대의 경우는 45%나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10대는 34.1%, 30대는 31.2%, 50대는 33.3%가 나와 20대가 국가권위에 대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비판적인 정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즉, 젊은 세대 중에는 국가권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보다 부정적이며, 이들 권위체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민주적이 아니라는 반응도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높다. 이러한 경향은 1960

년대에서 최근으로 올라올수록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박용현, 1986 : 23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1) 제도교육에 의한 사회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어린이들은 체제와 권위에 대하여 매우 높은 긍정도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지적 작용보다는 감정적 동일시 현상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 2) 그러나 10대 후반부터는 감정적 유대보다 합리적 인지작용에 의한 정치적 정향이 발달하게 되고, 그 결과 점차 정부 및 국가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러한 경향은 20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3) 정치적 신뢰감

정치체제와 정치지도자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존경, 믿음, 복종의식은 정치적 신뢰감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정치신뢰감은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현존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표현되기도 한다.

국민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재영교수(1979 : 168)는 “만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가정하면 다음 중 어떤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외국에서 살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 김교수는 이를 자궁심의 결여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아직 체제의 특성을 자세하게 인지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러한 결과는 자궁심의 결여라기보다는 체제와 권위에 대한 신뢰도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경규교수의 연구(1985 : 202-203)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나 정책결정에 대해서 불신감이 증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진덕규교수(1971 : 457)의 연구 또한 고학년이 될수록 조국에 대한 긍지가 약화되며, 교과서적 민주주의의 전개에 대해 회의가 강해짐을 밝혀낸 바 있다. 박용현교수(1980 : 897-398)의 연구도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행정부의 하는 일은 믿을 만하다”는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이 항목에서 20대가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어서 30대와 10대도 비교적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실현시켜 주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20대가 높은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10대의 경우도 나머지 연령 층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박용현 1980 : 410-411). 고영복 교수 (1982 : 31-32)에 의하면, 해방이후 30여년 간의 정치 속에서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자리잡지 못한 주요한 이유를 대학생들 중 36.8%는 권력자충의 비민주성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두번째 빈번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토분단 때문에 그렇다는 응답(16.7%)보다 훨씬 높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1981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전국표본 약 1,200명을 상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나라 사회 각 부문을 대표하는 18개 집단들에 대한 정치적 신뢰도, 부조리 행위 및 부당 영향력 지수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국가 권위체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세무서원, 국회의원, 경찰관, 고급공무원 등은 다른 사회집단에 비하여 정치적 신임도가 재벌 및 상인집단 다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이들은 부조리 행위 및 부당한 영향력을 가장 빈번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권위체들에 대하여 갖는 불신감의 정도는 대도시, 고학력, 고소득자에 많으며, 특히 나이와도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의 고등 교육을 받은 젊은 층들 중에 정치적 불신감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사회정화 위원회 1981b : 80-114). 또 한완상교수등(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 158-159)은 최근에 “정부의 발표”와 “우리나라의 매스컴의 보도”에 대해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는 테 대하여 국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바 있다. 이 문항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거나 “믿지 않는 편이다”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는 20대와 30대가 단연 40대 이상층 보다 많아, 젊은 세대들이 정부와 매스컴에 대해서 보다 큰 불신감을 가지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아주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들과,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현실”이 “매우 불만스럽다”는 응답도 전후세대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7 : 59, 154). 이들 각 문항에 대해서 전국 평균과 29세 이하의 연령층이 대학생들의 반응과는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가 알아보기 위해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대학생 집단의 정치적 신뢰감이 젊은 연령

〈표 1〉 정치적 신뢰감에 대한 집단별 비교

	전 국 평 균	29세 이하 연령	대학생 집단
	(1, 182명)	집단 (117명)	(504명)
(1) 부정 부폐가 “아주 심각하다”	40.6%	52.1%	69.0%
(2) 우리 나라의 정치현실이 “매우 불만스럽다”	22.3%	37.9%	55.2%
(3) 정부의 발표를 a) “믿지 않는 편이다” b)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28.8% 9.3%	45.3% 17.1%	67.6% 17.5%
(4) TV의 뉴스보도에 대해 a) “믿지 않는 편이다” b) “전적으로 믿지 않는 편이다”	37.2% 9.4%	43.6% 15.4%	67.6% 17.5%

* 대학생 집단은 동일한 설문을 비슷한 시기에 전국 11개 대학의 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이며, 이 표는 권태환 교수의 도움으로 작성될 것임.

총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더 약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2. 전후세대의 이념적 정향

(1)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

남북분단은 40여년간 한국정치의 전개과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발전 패턴, 산업화의 특성, 정치체제의 성격에 지대한 혼浊을 남겼다. 정치문화의 차원에서 볼 때도 남북분단으로부터 비롯된 정치적 파행구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이념적 정향이 민주적 체제로 발전해 가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손봉숙, 1983:85).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의식적으로 한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온 분단문제와 통일의식의 측면에서 전후세대의 의식과 가치관이 어떻게 기성세대와 비교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1984년 12월 국토통일원에서 발간된 “대학생·종교인의 통일문제 의견조사”를 보면 84년 현재 대학생은 57.66%가 통일은 “꼭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질문에 종교인은 77.25%가 통일의 가능성성을 점치고 있어 기성 세대보다는 젊은이들이 통일의 가능성을 보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국토통일원, 1984:15). 조형 교수(1977:29-30)는 1977년 사회 각급 지도층 인사 4,287명을 대상으로 “통일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70.7%는 통일의 “언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에 담하여 우리나라의 기성세대가 통일의 전망에 대하여 대체로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현 교수의 연구(1980:499)에서도 우리나라 전국표본의 65.8%가 통일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대수준이 높은 연령집단은 10대와 40대 이상이며, 20대와 30대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귀하는 현재 통일 가능성성이 70년대에 비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최근의 조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188)에서도 20대는 40.5%가 “줄어 들었다”고 보았으나, 30대 이상의 응답자들 중에서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은 20~24% 밖에 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평균 35.1%가 현재 통일의 가능성은 70년대보다 “줄어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통일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통일 가능성에 대해 기성세대보다 비교적 비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도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인 88%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준혁, 1985: 14-15). 이를 볼 때 대학생 집단과 20대 연령층이 기성세대에 비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더 비관적인 이유는 이들도 통일을 기성세대 만큼이나 원하고 희망하며, 이에 대해 관심도 크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시기를 언제를 예상하는가에 대한 설문들에서 보다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알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민병천 교수의 74년조사(1974: 25-31)에 의하면 50% 이상이 통일의 시기는 “미상”이라고 답했고, 20대와 30대의 청년총일수록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박용현 교수(1980: 527)의 연구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원하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40.3%, “아닌 것 같다”와 “확실히 아니다”라는 응답에 각각 20.4%와 6.4%에 달했다. 이 경우에서도 20대 중에 통일의 시기를 “미정” 또는 “부정”쪽으로 보는 비율이 많았음을 물론이다.

한편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면, “통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64.3%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교적 높은 통일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 연령

집단별로는 20대의 긍정적 반응이 가장 낮고(확실히 그렇다 : 26.66%, 그런 것 같다 : 26.50%), 다른 집단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떤 회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박용현, 1980 : 481). 이러한 사실들이 곧 20대의 통일의지가 가장 박약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회생도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통일을 지고의 가치로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념적 지향에 있어서 비교적 분화된 인지능력을 가질 수 있는 20대, 특히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여타의 여러 가치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기 쉽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연구가 필요하며, 통일 방식에 대한 의식 및 이데올로기 문제와도 관련시켜서 접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주장에 의한 통일이 아니면 차라리 분단되어 있는 편이 낫다”에 응답자의 60.1%가 찬성을 표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로 갈수록, 수입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율이 높았다. 그런데 10대와 20대가 이 주장에 대하여 동조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박용현, 1980 : 482-483).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20대의 통일관은 기성세대보다 덜 맹목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의지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덜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통일관이 결코 더 분단지향적이라는 확증은 없다. 오히려 이들은 남과 북이 일방적인 주장을 버리고, 보다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 보인다.

(2) 이데올로기 문제

국토통일원연구(1984 : 31)에 따르면 “통일 국가가 어떠한 체제여야 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절대다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라고 있으나 혼합체제를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고,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 그러한 응답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지역의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985년의 조사에 따르면 50.54%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로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쌍방이 결충한 이념과 체제로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28.20%에 달했다. 이에 비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가 아니면 차라리 분단상태가 낫다”는 대학생은 전체 표본의 15.1%밖에 되지 않았다(허준혁, 1985 : 21).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세대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학생집단은 타집단에 비해 이질적인 이해율로기에 대하여 훨씬 더 관용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정원 교수 등의 연구(1987: 276-280)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에 대해서는 선진국 학생들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그러나 추상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적 선택의 논리로 바꾸어 질문했을 때는 매우 다양하고 분산된 반응을 보였다.

박용현 교수의 연구(1980: 531-532)에서도 이념문제에 대하여 세대간에는 무시못할 편차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우리의 현실로 보아 자유나 민주보다 반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64.6%가 긍정하고, 18.1%가 부정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반공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40~50대는 70% 이상이 반공 우선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20대의 긍정도는 51%로 나타나, 젊은 세대는 반공에 대하여 기성세대보다 훨씬 회색된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영복 교수(1982: 31-35)는 대학생들이 공산주의에 비교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념 및 현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현실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는 가치는 “자유”와 “민주”라고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세한 이념이며, 현실적으로 문제점들이 있으나 자체내에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생이 60.3%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상대적 우월성을 부정하고 있는 학생도, 비록 많지는 않지만 7.3%라는 무시못할 비율로 나타났다고 한다. 동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공산주의의 이념자체가 허구적”인 것이라는 의견에 15.5%, “이념은 좋으나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는 의견이 64.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공산주의 이념에 맞는 이상사회는 실현될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여 많은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는 항목에는 16.5%가 찬성하였고, “역사상 공산사회의 문제점은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공산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는 학생은 1.1%였다.

고교수는 79.8%라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산주의는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허구적이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실현불가능하지만 그 이념자체는 좋다거나,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80.8%나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지향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 간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심정적 동조의식 또한 자못 강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공산주의에 대하여 대학생과 종교인의 반응을 분석한 통일원의 자료(1984 : 157-158)에서도 대학생들은 종교인들에 비해 공산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는 데 덜 동조하며, 실제는 나쁘지만 이론 자체는 좋다는 쪽에 62.5%나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종교인은 56.2%). 근자에 들어 대학생들이 이념지향성을 특히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오늘날 대학생들 중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적 동조의 폭이 무시못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심정적 거부반응이 비교적 덜 하며, 그만큼 체제유지의 필수품이 되어왔던 반공 이데올로기애에 대한 집착 또한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이상주의적 열정과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결합되어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러하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다.

(3) 민족주의관

민족주의란 용어는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여 사실상 국가이념 내지는 정치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해 적절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 속에서 민족주의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문제의 범위를 한정시켜서 살펴보겠다.

몇몇 연구들이 대학생들에게는 사상과 이념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고영복 교수의 연구(1982 : 37-38)에 의하면 다수에 해당하는 59.0%의 학생들이 후진국으로서의 국가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는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62.6%의 학생들이 비동맹운동을 포함한 제 3 세계의 민족주의적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북한이 축구경기를 할 경우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전체를 표집한 조사에서는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측이 78%,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사람들이 22%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 21). 그러나 20대 연령층의 37%와 30대

의 25%는 미국보다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하여, 40대의 19%와 50대의 17%가 북한편을 응원하겠다는 분포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 179). 같은 문항에 대하여 대학생들 중에는 61.6%가 미국보다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응답하여 오히려 북한편을 드는 측이 훨씬 우세하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통일관을 조사한 85년 통일원 자료(허준혁, 1985 : 73)에서도 미국응원이 16.73%, 북한응원이 71.47%로 나와 이러한 경향이 일회적·단기적 현상이 아님을 시사해 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보면 대학생들은 일반국민들에 비해 훨씬 더 강한 반미감정 내지는 민족주의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북한체제아래 고생하는 동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문항에 대해 30대는 72.86%, 40대는 78.91%, 50대는 77.83%, 60대는 71.28%가 강한 동조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20대는 동조율이 46.37%에 머무르고 있고 10대는 60.7%로 나와, 이 점에서도 젊은세대는 기성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용현, 1980 : 491). 한편, 남북한의 생활실정을 비교하는 물음에 대해 대학생들은 66.99%가 남한이 북한보다 낫다는 견해를 보였다. “서로 비슷할 것이다”는 21.33%, “북한이 낫다”는 항에는 6.86%, “전혀 모르겠다”에는 4.82%가 응답하였다(허준혁, 1985 : 75).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이념적 경향에 있어서 전후세대는 전전세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감정적인 대북한관과 통일의식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는 남북한간의 체제차이나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합리주의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의 측면에서도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보다 문화(differentiated)된 정향을 견지하고자 하며, 따라서 공산주의에 대한 관용의 폭도 기성세대에 비해 더 넓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산재된 결과들을 통해 유추해 낸 가설이며, 보다 체계적인 연구에 의하여 밝혀질 필요가 있는 잠정적인 결론에 불과하다.

3.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의식

정치적 효능감(potential efficacy)은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이 정치과정이나 지도자의 행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정치참여란 이러한 정향 및 의식이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행

동으로 표출되는 양식인데, 그 구체적 형태에는 법적인 것에서부터 불법적인 것, 평화적 방식과 폭력적인 유형,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에서부터 동원된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Milbrath, 1965; Verba & Nie 1972; Huntington & Nelson 1976 등 참조).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참여의식과 행위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이며, 활동적이다. 반면에 효능성이 낮거나 소외적·냉소적 경향이 강할수록 권위에 묵종하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참여통로나 방법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려는 경향도 강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치적 효능감이 높다고 해서 정치참여도 반드시 높다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의식과 문화가 사람들의 행태로 표출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도 결정적 매개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는 정치적 지도력, 정권의 특성, 정치적 결정 등 정치구조적 변수들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고 지향하는 바가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분위기가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권위주의적·억압적 체제하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는 억제되고 그 대신 동원된 참여만이 허용되거나, 아니면 참여에 대한 의욕과 행동이 비합법적이고 투쟁적·항거적인 형태로 발전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효능감이나 참여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체제의 특성과 구조적 차이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투표라는 반형식적 참여방식 이외에 민주적 방식에 의한 참여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합법적 참여가 분출하는 우리나라의 대학생운동을 이해하려면 특히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 외국의 경우에 비해 일반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약하고 소외적·냉소적 태도가 강하며, 참여형이라기 보다는 묵종적·소극적 정치문화 유형에 가깝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김충남, 1982: 75-83; 사회정화위원회, 1981a: 95-115; 한배호, 어수영, 1987: 55-70). 그러나 한 나라의 정치문화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동질적 특성이 그대로 지속되는 법이란 없다. 동시에 한국인의 정치경향은 여러가지 하위그룹으로 나뉘어져 각 집단마다 특정 정향의 분포패턴이 다르리라는 것도 쉽게 짐작 가능하다.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으며, 외래문물의 유입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 변화의 폭과 정도가 빠를 것이 분명하다. 이영호(1980: 51), 길승흠(1986: 53) 교수 등의

연구는 서구사회와의 접촉으로 인한 외적 충격과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이란 내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한국의 정치문화는 권위주의적·신민형 문화로부터 점차 민주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유형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폭과 양상은 특히 세대간에 문화적 단절현상을 놓기 쉬운데 이 절에서는 참여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조명해 보려고 한다.

배성동 교수(1975:325) 등의 연구에 의하면 정치적 효능감은—근대적 사고방식의 수준, 정치지식, 정치관심도 등과 함께—젊은 층일수록 높아진다고 하였다. <표 2>는 1981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정화위원회, 1981a:98)가 전국표본 1,20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의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세대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세대간에는 정치적 효능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젊은 세대들—특히 20세 이하나 20~29세—은 기성세대 보다 훨씬 더 정치에 대하여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참여 지향적이다. “관청으로부터 억울

<표 2>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의지의 연령별 분포

연 령	문 항	정부가 하는 일에는 내가 간섭하는 것보다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만약 관청으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치는 너 무 볼점하 여 나같은 사람이 이 해 할 수 없 다.*	좋은 지도 자가 있다 면 모든 것 을 그에게 맡기는 것 이 좋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 겠다.	관에서 알아서 해주어야 한다.	소용없 으므로 어쩔 수 없다.	유효 응답자 수	
20세 이하	40.0%	37.1%	68.4%	62.2%	35.1%	2.7%	37	
20~29세	38.1	48.0	65.8	67.6	21.0	11.4	352	
30~39세	59.6	72.3	84.6	58.5	30.6	10.9	284	
40~49세	59.2	80.7	88.4	52.3	36.3	11.5	262	
50~59세	66.7	86.5	86.0	52.4	31.9	15.7	166	
60세 이상	65.3	88.3	94.6	47.2	34.7	18.1	72	
전국평균	54.1	69.1	80.4	58.4	29.6	12.0	100	
유효응답자수	1,061	1,172	1,135	685	347	141	1,173	
X ² 의 유의도	0.00	0.00	0.00		0.001			

*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므로 수치가 낮을수록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로 해석해야 함.

출처 : 사회정화위원회, 「사회발전과 국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1), p.98(표 III-25) 및 p.101(표 III-31).

한 대우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응답도 40대 이하와 특히 20대가 기성세대들 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광웅 교수(1985: 88-89)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정치란 원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설문에 20대는 83.7%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30대는 68.9%, 40대는 67.8%, 50대는 60.3%가 각각 반대하였다. 투표에 참가하는 이유에 대해 서도 50대 이상은 “나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한다”는 데 31.9%가 동조하였다. 20대는 81.1%가 “나의 권리이니까 자발적으로 한다”에 응답하였다. 길승희 교수(1985: 59)는 1978년과 85년 사이에 “평소에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들과 선거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졌음을 발견하였으며, 이 두 조사에서 모두 20대가 정치적 관심과 적극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한국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들보다 정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정치적 효능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처럼 높은 정치적 효능감과 적극적 참여지향성이 과연 행동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 공식적 참여행위로는 보기 힘드나 공개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불만을 표시해 본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약 37%에 달한다(사회정화위원회, 1981a: 107-108). 그리고 이런 경험은 20대의 약 50%가 해보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39%), 40대(37%), 10대(34%)의 순서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에는 공개적 불만을 표시해 본 수가 30% 이하로 내려갔다. 이처럼 나이가 젊은 응답자들 일수록 “불만을 표시해 본 경험”은 많았다. 이에 비해서 공식적·합법적 참여형태에 속하는 투표, 정치적 모임참가(선거유세, 공청회 등), 관청에 문의 또는 진정한 경험, 정당이나 입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거나 관청에 대표로 파견된 경험 등에서는 모두 20대 이하 연령층의 참여율이 30대 이상보다 훨씬 낮았다(사회정화위원회, 1981a: 112-113 참조). 한배호·어수영 교수(1987: 180-181)의 연구에서도 20대는 투표참여율과 선거유세에 참여한 경험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에 대한 의욕은 다른 연령집단보다 월등하게 높은 데 비해 실제투표나 선거운동 등 공식적 참여에서는 이처럼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를 보다 자세히 추적하려면 보다 많은 매개변수의 역

할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치적 불만이나 소외감, 냉소주의도 높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20대가 공식적 참여행위에 비교적 소극적인 이유는 정치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발견하는 괴리현상의 발로가 아닌가 한다.

지난 40년간 한국의 젊은 층, 특히 대학생들은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압력집단의 역할을 뼈맡아 왔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진보된 민주주의 이념에 접해왔고, 해외의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치적 이상의 모델을 찾아왔으며, 현실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참여의욕을 학습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와 권위에 대하여 갖는 현실적 이미지는 이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모델에 비해 너무나 큰 거리감을 안겨주었다. 이와 같은 거리는 정치권위체에 대한 지지도를 감소시키고 체제에 대한 부정의식과 정치적 행동주의를 촉진시킨다. 권위주의체제와 억압적 권력장치하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행동주의는 초법적·폭력적 참여로 폭발되기 쉽고, 과격하고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와 접합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오늘날 한국의 학생운동이 기성세대의 눈에 비합법적, 급진적, 전투적 성향을 띠게 된 배경 속에는 이처럼 민주적 정치참여와 변혁의 의지를 구조적으로 봉쇄시켜 왔던 정치체제의 성격에도 그 이유가 적지 않게 기인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정치문화와 가치정향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심각한 단절현상을 겪고 있으며, 세대차이의 문제는 단순한 이념적 갭의 차원을 넘어 바야흐로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 정치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함의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의식과 관련된 현대한국의 정치문화적 특성을 세대간의 격차라는 각도에서 추적해 보았다. 머리 부분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아 이 글은 체계적,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라기 보다 종래의 연구에서 발견된 여러가지 사실들을 종합, 정리하는 가운데, 어떤 경향과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한 예비적 고찰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된 결과들은 확증된 연구결과라기 보다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밝혀야 할 가설들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보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앞에서 발견된 잠정적인 결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밝혀낼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문화와 한국인의 정치의식은 매우 복합적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권위주의”나 “회오리 바람”(Henderson, 1968)의 정치문화 등과 같은 단원적 설명은 점차 그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계층과 세대, 거주지, 직업 등에 따른 문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국민의 정치적 가치와 정향도 매우 이질성이 높고 다원적인 산업사회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물론 한국의 정치문화가 전통적 속성을 하루 아침에 일탈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전환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은 여러가지 하위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원적인 틀에 맞추어 그 정치정향과 문화유형을 논하기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정향이 복합적이고 다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정치체제의 투입이나 산출기능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표출하고 있는 기대와 요구도 그만큼 다양하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다양해지고 있는 정치적 요구체계를 관료적 발상이나 권위주의적 정책결정 방식으로 충족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각계 각종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정치체계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려면 이들이 경상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 원하는 바를 집약하여 정치과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체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와 체널이 막히거나 제 구실을 못하게 되면, 자연 체계에 대하여 국민들이 갖게 되는 불만과 좌절, 그리고 비판의식과 갈등의 수위도 그만큼 높아지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오늘날까지 당면해 온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분출과 정치적 투쟁은 곧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업화와 관련된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인과관계의 경로는 단선적이라기 보다는 우회적이며 복잡하다. 의식과 태도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과정도 역시 여러 갈래의 매개적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한 사회체계의 변동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산업화 그 자체라기 보다는 그것을 포함한 전반적 변화를 주도하는 정치적 지도력, 정권의 속성,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결정 등 이른바 “정치적 선택성”에 크게 달렸다(김경동, 1985 : 266). 특히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사회관계를 주도하는 후발산업국의 경우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적 정향은 정치체계의 능

력과 지배층의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치문화를 정치체제의 특성—예컨대 민주화—을 규정하는 독립변수로 취급해 온 종래의 구조기능주의적 정치사회화 이론만 가지고는 후발산업국의 정치문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즉, 정치문화는 일면 정치체제의 발전경로를 규정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체제의 성격과 정치적 선택여부에 따라서 특정 문화유형이 재생산되거나 유지 및 강화되는 측면도 강하다. 이를테면 문화는 체제의 종속변수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Gramsci(Williams, 1960), Althusser(1971), Miliband(1969), 등의 해계모니이론 및 코포라티즘 모델(Cohen, 1982)에서 제시하는 정치사회화 이론들에서 암시받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선진자본주의사회의 계급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치문화를 계급구조의 종속변수로만 취급하거나 경제결정론을 폄는 이들의 이론 역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 정치문화의 문화형태 및 각 부문간의 갈등과 잠재적 모순관계는 계급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앞서 정치적 선택 및 권력구조의 특성과 보다 깊게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는 세대간의 갈등, 특히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정치적 반발과 항거라는 양상으로 집약되어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

왜 하필 한국사회의 정치적 모순은 세대간의 갈등과 특히 대학생들의 현실 참여 운동 등 탈제도적인 유형과 행태로 나타나기 쉬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은 이 연구의 범위밖에 속하는 일이지만, 앞에서 검토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갈래의 이론적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 중 하나는 정치사회화의 환경적 여건 및 그 매개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구조와 권위체들의 구조적 경직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시도해 보는 일일 것이다.

정치사회화의 환경적 여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지속적·조화적 정치문화를 학습하여 전승시킬 수 있는 좋은 풍토를 마련해 주는 데 실패하였다. 근대화와 급속한 산업화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와 조화로운 사회화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외부사회와 빈번히 교류하고 선진국 사회에 문화적·경제적·정치적으로 종속된 국가일수록 이 점에서는 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일수록 젊은 세대들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권위체들에 대한 보다 나은 모델로서 선진국을 택하며, 그 대신 자기 사회와 동일시하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이들은 정치 의식과 정향에서 자국의 정치권위를 불만족스럽고 비판적인 눈으로 볼 가능성도 크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하여 근대에 들어와 역사적, 문화적 단절현상을 몇번이나 겪었다. 왕조체제에서 식민지치하로의 전락, 분단과 전쟁과 냉전으로 말미암아 민족주체성과 자존심에 깊은 상처와 정치적 혼란이 따랐다. 그 결과 엘리트와 대중, 과거와 현재,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를 잇는 연속성과 유대관계에는 깊은 틈이 생겼다. 6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민주화가 수반되지 못한 채 강압적 장치에 의존해 온 정치권력은 정당성과 정통성의 위기를 가중시켰고, 오히려 민족과 국가의 주체성과 그 문화적 전통을 성공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부작용을 더했다. 그 결과 엘리트와 대중, 어른들과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와 자녀들 간에는 문화적 단절현상이 심화되었고,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근대적이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육시킬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른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바람직한 사회화의 모델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은 요즈음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전부하다고 믿는 정치사회화의 매체들에 대해서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 중에는 가정, 학교교육, 매스미디어, 종교 등 기성사회의 사회화기제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영향받는 부분이 극히 미약하다. 신문이나 TV 등 매스미디어의 공정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신뢰가 낮다는 것은 이미 살피 바 있지만, 학교교육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신정도가 높다. 특히 대학생들은 학교의 정규교과과정에 대하여 전면 불신에 가까운 평가점수를 주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 사회화기제에 대한 불신감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기성세대의 가르침보다 자유로운 서적탐독이나 서클활동 등 동료간의 대화를 통해 의식과 사고형성에 큰 영향을 받게 만들고 있다. 예컨데 1985년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신문의 한 조사(대학신문, 1985년 10월 14일)에 따르면 서울대생들의 의식이나 사고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대상으로는 자유로운 서적탐독이 43.5%로 가장 많았고 동료로 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은 26.8%에 달했다. 그러나 부모(10.3%), 종교

(9.3%), 교수(2.6%), 매스미디어(2.2%)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감이 “매우 크다”가 73.4%, “약간 있다”가 23.4%에 달했다. 정규적 정치사회화의 매개체들이 이처럼 젊은 세대를 이끌어 가는 데 크게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장래가 그만큼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오늘날 기성세대가 정치적으로 불신받고 젊은 세대가 정치과정의 일선에 뛰어들어 민주화투쟁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나서게 된 이면에는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경직성 및 권위주의정권이 초래한 유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봉건적 조선왕조체제 하에 있던 한국인은 자생적 변화와 자기비판을 거쳐 근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일제의 식민주의에 의해 박탈당하고 말았다. 해방, 분단, 동란을 거치는 동안 전통적 사회조직이 와해되는 가운데 관료, 군부, 경찰 등 국가부문의 영향력은 점차 팽창해 온 반면에, 자발적 결사조직과 이익집단이 정치과정에 설 땅은 좁아들었다. 더구나 남북한간의 긴장으로 인해 이념적 지평이 극히 제한된 가운데 진보주의적 정치운동은 권위주의적 권력 앞에 얹압되기가 일쑤였다.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자본축적이 취약하고, 시장이 좁고, 자원도 결핍된 나라가 기대야 할 정책은 자연 풍부하고 값싼 인력을 활용,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만든 제품들을 외국시장에 내다파는 수출지향형 경제성장책이었다. 저임금과 불리한 여건 아래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노동문제에 대한 강압적 국가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 모든 결과는 사회와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배적 역할과 간섭으로 나타났고, 정권은 사회 각 부문의 요구표출을 정치적 강압수단과 관료적 통제방식으로 대응하는 대신 양보와 타협의 길을 열어주지 못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표출하는 정상적인 기회와 민주적 방식에 의한 참여를 박탈당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집합적·초법적으로 목표달성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정치적 이상주의에 쉽게 동조하고 현실과 이상간에 높은 괴리감을 느끼는 젊은 층과 대학생들이 구조적 경직성에 의해 둑여있는 소외집단이나 노동계층 등의 요구를 대변하고 나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인지도 모른다.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정치적 항거와 정권을 겨냥한 일부 과격파의 투쟁은 이와 같이 정치구조와 권력집단의 경직성이란 관점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어느 사회나 세대 간의 의식격차는 있게 마련이다(Inglehart, 1971, 1977 참조). 그러나 선진사회의 젊은 세대는 대부분 자기사회 내부에다 정치사회화의 준거모델을 설정하고 있으며, 또 시간이 지나 성년이 되면 젊은 층도 기성사회의 가치관과 타협하거나 서로 수렴해 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체제 안정에는 별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치체제 또한 이들의 요구와 가치를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오늘 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세대 간의 의식격차와 정치적 갈등은 선진사회의 세대차이 문제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른 바 종속적 사회속에서 젊은이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화의 준거모델은 대부분 미국, 일본, 구라파 등 외래적인 것들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들은 선진민주주의 사회의 가치기준들을 은연 중에 이상화하고 자기사회에 대해서는 비하적인 태도를 갖기 쉽다. 학교교육 또한 이러한 가치와 태도들을 집중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다. 정치적 후진성과 사회구조적 경직성 때문에 젊은이들은 더욱 더 자기사회의 권위체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고 소외된 정향을 가지기 쉬우며, 때때로 이러한 좌절의식은 이들을 급진주의적 이념에 편도하게 하거나 폭발적 행동주의로 내몰기도 쉽다. 우리 사회의 젊은 이들도 차차 나이가 들면 기성세대에 편입되어 현실을 긍정하고 주어진 체제에 안주하는 이들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세대간 갈등이 더욱 구조화되고 지속적인 정치문제로 남을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 두 가능성 중 어느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적 선택의 원리에 무엇보다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대간의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결국 사회전반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원리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대문제를 푸는 길은 우선 젊은이들의 비판적 시각을 기성세대가 건설적으로 수용하고 수렴해 가는 한편, 이들이 표출하는 운동적 성향을 경상적·제도적인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치인들의 노력과 자세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高永復

1982 “韓國大學生의 意識과 思想”, 「現代社會」 봄.

國土統一院

1984 「大學生·宗教人 統一問題意見調查」.

吉昇欽

1985 “韓國人の 政治意識構造 變化：1978年과 1985년”, 「第六回 公同學術大會論文集」, 韓國政治學會.

金環東

1985 “韓國의 工業化와 產業民主主義”, 「東下 李克燦教授 回甲記念論文集：民主主義와 韓國政治」, 法文社.

金光雄

1985 “民主意識과 投票行態”, 「第六回合同學術大會論文集」, 韓國政治學會.

金圭澤

1969 “政府에 대한 어린이들의 태도”, 「韓國政治學會報」第三輯, 韓國政治學會.

1971 「韓國政治動態論」, 一潮閣.

金明會·咸義英·尹亨燮

“韓國人の 投票行態와 政治定向에 關한 研究”, 「延世論叢」第七輯, 延世大大學院.

金在沫

1979 “韓國어린이들의 社會화過程에 있어서 國民의 一體意識에 關한 研究”, 「社會科學研究」6권, 전북대.

金忠男

1982 「政治社會화와 政治教育」, 法文社.

閔丙天

1974 「階層別 統一安保觀 調查」, 國土統一院.

朴容憲

1980 “現代韓國人の 政治意識에 關한 調査研究”, 「韓國思想論叢」,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解放 40年：價值意識의 變化와 展望」,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6 「대학생의 이데올로기는 뭔가」, 「政經文化」4.

裴成東·吉榮煥·金宗林

1975 “韓國人の 政治參與形態과 그 特性”, 「第一回合同學術大會論文集」, 韓國政治學會.

社會淨化委員會

1981a 「社會發展과 國民意識에 關한 調査研究」.

1981b 「社會淨化度 測定」.

서울대 社會科學研究所

1985 「青少年意識構造 調査研究」.

1987 「轉換期의 韓國社會」.

孫鳳淑

1983 “韓國의 政治文化와 反共理念”, 「韓國政治學會報」第十七輯, 韓國政治學會.

劉鍾海

- 1975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 「第一回合同學術大會論文集」, 韓國政治學會.

尹天柱

- 1979 「韓國政治體系：政治狀況과 政治參與」, 서울대학교 出版部.

이남영

- 1985 “산업화와 정치문화：민주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第十九輯, 韓國政治學會.

李永鏘

- 1976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 「韓國政治論」, 博英社.

- 1980 “韓國의 社會·經濟的 變革과 政治文化의 變化”, 「社會科學論集」1, 梨大法政大學.

李在玉

- 1984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形成社.

李正馥

- 1982 “韓國의 社會階層과 政治文化”, 「現代社會」1, 現代社會研究所.

- 1985 “產業化와 政治體制의 變化”, 「韓國政治學會報」第十九輯, 韓國政治學會.

李知勲

- 1982 “韓國政治文化의 基本要因”, 「韓國政治學會報」第十六輯, 韓國政治學會.

張俊翰

- 1976 “우리나라 高校生 및 大學生의 意識構造”, 「교육평론」4~6.

丁得圭·金鍾益

- 1971 “韓國人의 政治意識의 構造의 分析”, 「論文集」17권, 전남대학교.

趙一文

- 1973 “韓國政治文化의 構造의 特質”, 「建大學報」, 建國大.

趙正源·玄鍾敏

- 1987 “韓國大學生의 現實참여에 관한 研究：民主姿勢와 政治參與을 中心으로”, 第七回 韓國政治學會·在北美韓國政治學者會 合同學術大會(1987. 7. 27~29).

趙 馨

- 1977 “統一安保에 관한 輿論調查”, 國土統一院.

陳德奎

- 1971 “政治社會化過程에서의 狀況의 諸要因의 影響力에 관한 研究”, 「論叢」第18輯, 梨大 韓國文化研究院.

青少年對策委員會

- 1984 「青少年白書」.

최경규

- 1985 “중고등학생의 정치적 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청년연구」8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韓太壽

- 1968 “韓國大衆의 政治意識에 관한 考察”, 「芝陽 申基碩博士華甲記念學術論文集」, 三和印刷所.
- 許拔赫
1985 “統一問題에 관한 大學生의 意識構造研究”, 國土統一院.
- Almond, Gabriel A. and Verba, Si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lthusser, Louis
1971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Notes on Investigation,” in Althusser,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Press.
- Cohen, Youssef
1982 “The Benevolent Leviathan: Political Consciousness away Urban Workers under State Corporat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1, March.
- Henderson, Gregory
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and Nelson, Joan M.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No. 4, December.
- Milbrath, Lester
1965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 Miliband, Ralph
1969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Chapters 7 and 8.
- Verba, Sidney and Nie, Norma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Williams, Gwynn
1960 “Gramsci's Concept of Hegemony,” Journal of History of Ideas, Vol. 21, No. 4.